

현안과 과제

■ 가계 세금부담 추이와 시사점

- 고소득층, 상용직, 근로자가구 稅부담 증가



< 요약 >

■ 소득세 구조 및 부담 추이

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, 소득세 관련 각종 공제를 감축하는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어서, 소득세 구조와 부담 추이를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다.

우리나라 소득세는 5개 과표구간 하에 명목세율이 최저 6%에서 최고 38%까지로 구성되어 있지만,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들의 1/2수준에 불과하다. 하지만, 최근 세금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면서 가구들의 소비여력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.

■ 가구별 세금부담 추이

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로, 그리고 가구 특성별로 세금부담[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(경상소득-재산소득-이전소득)]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.

소득세 세금부담의 추이를 ①**소득분위별로** 보면, **소득5분위**가 가장 높았고, 5분위와 4분위 이하의 세금부담 격차는 최근 더 벌어지고 있다. ②**직업별로** 보면, **상용직 근로자** 가구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고,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,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세금부담은 낮은 상태에 있으며 하락하고 있다. ③**연령별로** 보면 **40대**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가장 무겁고,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가벼웠다. ④**가구원수별로** 보면, **1, 2, 3인**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상승 추세로 반전했으며, **4, 5인**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하락 추세로 반전했다. 특히, **6인 이상** 가구의 세금부담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. ⑤**세대별로** 보면, **조부모-부모-자녀** 세대가 함께 사는 **3세대** 가구의 세금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. ⑥**맞벌이 여부**로 보면, 최근 **맞벌이** 가구의 세금부담은 체자리에 있는 반면, **홀벌이** 가구의 세금부담은 계속 증가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.

■ 시사점

2012년 현재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가구는 '**소득5분위에 속하는 40대 홀벌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부부 둘만 사는 가구**'다. 반대로,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가구는 '**소득1분위에 속하는 20대 맞벌이 자영업자로서 3대가 함께 사는 가구**'다.

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세제개편 논의의 참고 사항을 제안하면, 첫째, **소득분위간 세부담 격차의 조정**이다. 특히, 소득5분위와 '4분위 이하 가구'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둘째, **상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격차를 줄이는**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. 셋째, **가장 어깨가 무거운 40대 가구**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. 넷째, **저출산 고령화** 추세를 감안하여, **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배려하는** 방향으로의 인센티브 재조정이 필요하다.

1. 소득세 구조 및 부담 추이

- (연구 배경) 최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, 고소득자(부자)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어서, 소득세와 소득세 세금 부담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함
 - 정부는 “세율을 올리지 않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는 늘리는 스마트한 정책을 펴겠다.”¹⁾고 하지만,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²⁾도 제기됨
 -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부담 추이를 가구주의 특성별로 분석해 봄으로써, 8월부터 본격화될 세제 개편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함
- (소득세 개요)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(종합과세)하는 것이 원칙이며, 세율은 6%에서 38%까지, 과표구간은 5개로 구분
 - 6가지 소득(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) 중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한 5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함
 - 장기간 소득이 집적된 ‘양도소득’과 ‘퇴직소득’은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음
 - 2011년 기준 근로소득 결정세액의 급여총액 대비 비율은 4.1%에 불과함

<세법 상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>



<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(2011년)>

과세표준 구간	명목 세율	근로소득세		
		인원 (천 명)	급여총액 (조 원)	결정세액 (조 원)
과세 미달	-	5,605	45.7	-
0 ~ 1,200만원	6%	5,868	132.2	0.8
1,200 ~ 4,600만원	15%	3,387	176.6	6.4
4,600 ~ 8,800만원	24%	547	53.7	4.8
8,800 ~ 3억원	35%	121	21.3	3.6
3억원 초과	38%	12	8.3	2.3
전체 (실효세율*)		15,540	437.8	17.8 (4.1%*)

자료: 국회 예산정책처(2013), 국세청(20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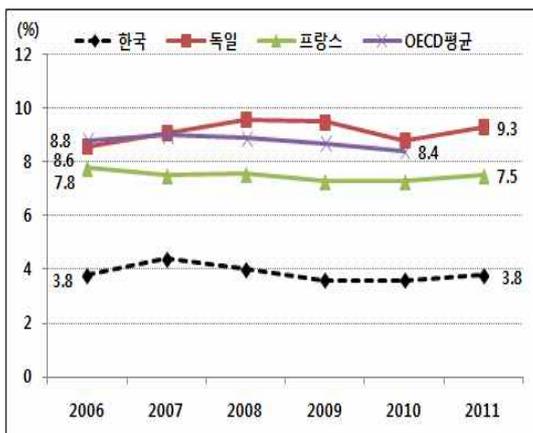
주1: 분리과세 대상= 일용직 근로소득,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, 1천2백만원 이하 연금소득

주2: 실효세율(4.1%) = 결정세액(17.8조원) / 급여총액(437.8조원) *100

- 1) 정부 측에서는 세출구조를 조정하고,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,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
- 2) ‘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대’라는 정부 측 주장에 한계가 분명하며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 예를 들어, 국회 예산정책처와 건전재정포럼에서는 ‘부가가치세 인상’을 주장한 바 있으며,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‘부자 증세’를 주장하기도 함

- (소득세 부담 추이) 우리나라 소득세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.8%로서 OECD 평균의 1/2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, 최근 세금을 포함하는 비소비 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있음
 - GDP 대비 소득세 세수의 비중은 2011년 현재 3.8%로서 OECD 평균(2010년 기준) 8.4%에 크게 못 미침
 - 독일은 소득세 부담의 GDP 대비 비중이 9.3%로 우리보다 2배이상 높으며, 프랑스는 7.5%로서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
 -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7.5%에서 2012년 18.6%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, 가계의 소비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
- (실제 세금부담 분석 필요) 명목세율은 선진국과 비슷한데 소득세 비중은 선진국의 50%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 세금부담이 명목세율에 비해 낮다는 의미이므로,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
 -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별 '세금부담'³⁾의 자세한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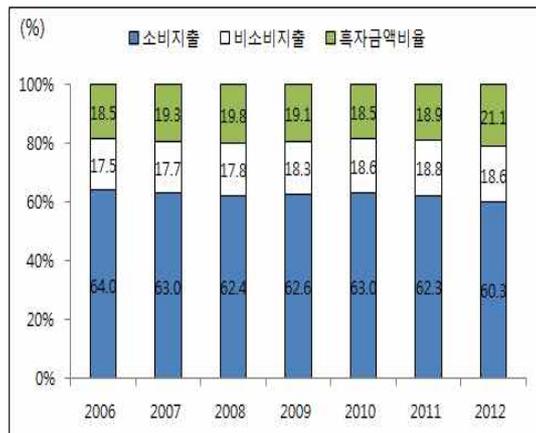
< 낮은 GDP대비 소득세 비중 >



자료: OECD Tax Database

주: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

< 증가하는 非소비지출 비중 >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, 각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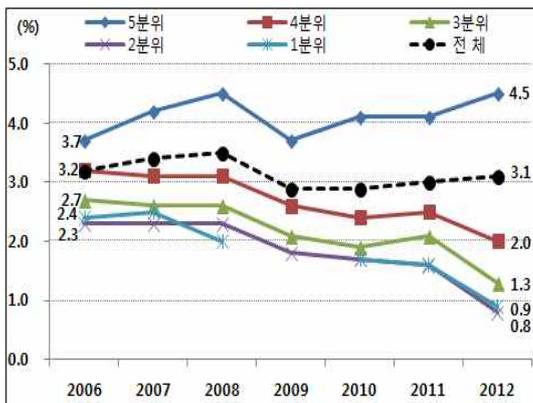
주: 비소비지출에는 세금, 사회보험 등 포함

3) 본 보고서의 **세금부담**(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(경상소득-재산소득-재산소득))이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경상소득(소득공제 이전)으로 나눈 것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계산한 것. 2011년 현재 가구별 소득세 세금부담은 3.1%에 불과하여, 국세청의 급여총액 대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(4.1%)에 비해 다소 낮는데, 그 이유는 통계청 자료의 경상소득에는 비과세소득과 공제 안 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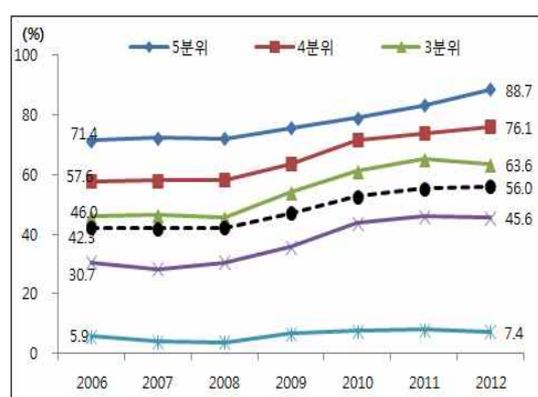
2. 가구별 세금부담⁴⁾ 추이

- (소득분위별) 소득분위별 세금부담을 살펴보면, 2010년부터 소득5분위(고소득층)의 세금부담은 증가한 반면, 4분위 이하(중간층과 저소득층)의 세금부담은 하락하면서, 소득분위가 세금부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
 - 전체적으로는 2008년까지 세금부담이 증가했으나, MB정부 이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세금부담이 떨어지고 있음
 - 2008년 3.5%였던 세금부담은 감세정책의 추진으로 2009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 2.9%까지 내려갔다가, 2012년 3.1%로 소폭 올라감
 - 소득분위별로 보면, 소득5분위(고소득층)의 세금부담은 2006년 3.7%에서 2012년 4.5%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나, 반대로 소득 1분위~4분위는 하락함
 - 1분위는 2006년 2.4%에서 2012년 0.9%로 하락했고, 소득 2분위는 같은 기간 2.3%에서 0.8%로, 3분위는 2.7%에서 1.3%로, 4분위도 3.2%에서 2.0%로 하락
 -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6년 42.3%(622만 가구)에서 2012년 56.0%(919만 가구)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- 납세가구 비율을 1분위 7.4%에서 5분위 88.7%까지 격차가 매우 큼

<소득5분위별 세금부담 추이>



<소득5분위별 소득세 납부가구 비율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)

주1: **세금부담** = 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(경상소득-재산소득-재산소득)*100

주2: 소득세 납부가구 비율 = (경상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내는 가구)/전체가구*100

주3: 2009년 1분위 세금부담은 4.6%로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, 그래프 상에 표기하지 않음

주4: '경상조세 값이 0인 가구' 제외

4) 세금부담이란 정기적으로 납부한 세액(경상소득세 + 사업소득세)을 정기적으로 취득한 소득(경상소득에서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을 제외한 것. 소득공제 이전 소득)으로 나눈 것으로,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것. **세금부담** = 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(경상소득-재산소득-재산소득)*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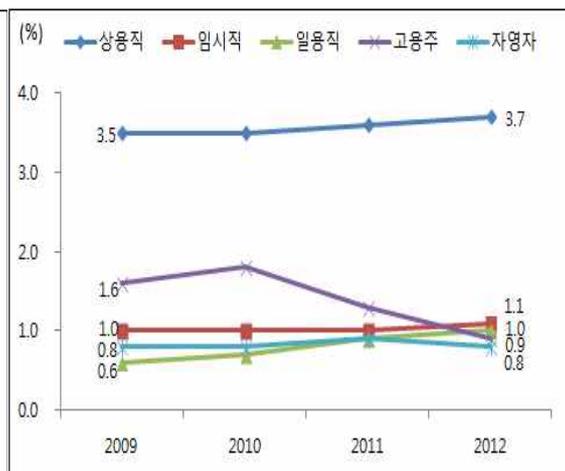
○ (직업별)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이 고용주, 자영자 등 근로자의 가구의 세금부담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물론, 2009년 이후 두 그룹간의 세금 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

- 사무직 생산직 등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고용주 자영자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매우 높으며, 2009년 3.2%에서 2012년 3.5%로 상승하고 있음
- 반면, 고용주 자영자 등 근로자의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9년 1.4%에서 2012년 1.3%로 소폭 하락하면서, 근로자 가구와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짐
- 종사상지위별로 보면, 상용직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2009년 3.5%에서 2012년 3.7%로 소폭 증가한 반면, 고용주의 세금부담은 2009년 1.6%에서 2012년 0.9%로 크게 하락함
-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자의 세금부담은 2009년 0.8%에서 2012년 0.8%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
- 반면, 임시직과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 그룹의 세금부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폭 증가하고 있음(※ 임시직 1.0%⇒ 1.1%, 일용직 0.6%⇒1.0%)
-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 자영자 등의 세금부담은 낮고 하락하는 추세임에 비해, 상용직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

<근로자가구 소득세 세금부담 추이>



<종사상지위별 소득세 세금부담 추이>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, 각 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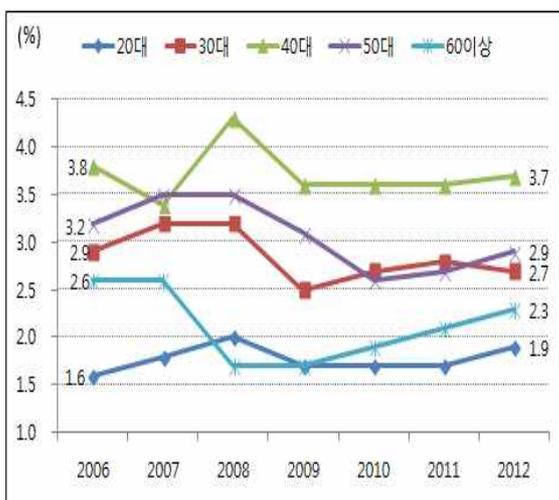
주1: 세금부담 = 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(경상소득-재산소득-이전소득)*100

주2: 2009년부터 종사상지위의 구분이 변하여, 2006년-2008년 데이터는 사용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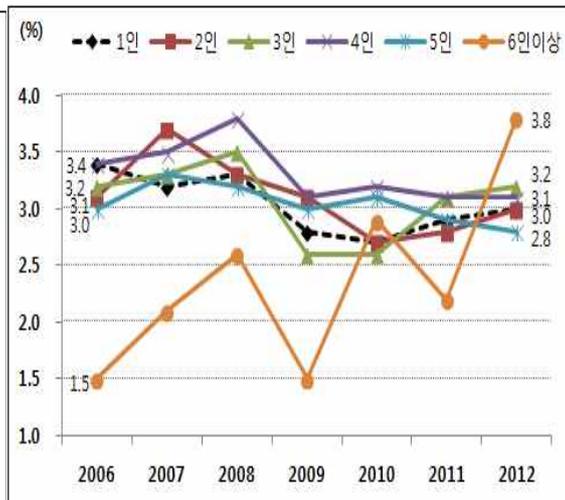
- (연령별) 40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가장 무겁고,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가장 가벼우며, 30대와 50대가 중간 정도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음
 -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구의 세금부담이 가장 높아, 부양해야 할 가족과 교육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가장 많은 시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도 가장 많아,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
 - 2012년 기준 세금부담 순위 : 40대 > 50대 > 30대 > 60세 이상 > 20대
 - 추세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 20대와 50대, 60세 이상의 세금 부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, 반면 30대의 세금 부담은 감소 추세에 있음

- (가구원수별) 1인, 2인, 3인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, 4인, 5인 가구의 세금부담은 최근 하락 추세로 반전했으나, 6인 이상 가구의 세금부담이 최근 급등함
 - 1인, 2인, 3인 가구의 세금 부담은 2006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, 6인 이상 가구는 2006년 이후 급등하고 있음
 -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여 4인, 5인 가구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
 - 6인 이상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재구성해야, 사회 전체의 영유아 보육 부담과 고령자 돌봄 서비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

<연령별 세금부담 추이>



<가구원수별 세금부담 추이>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, 각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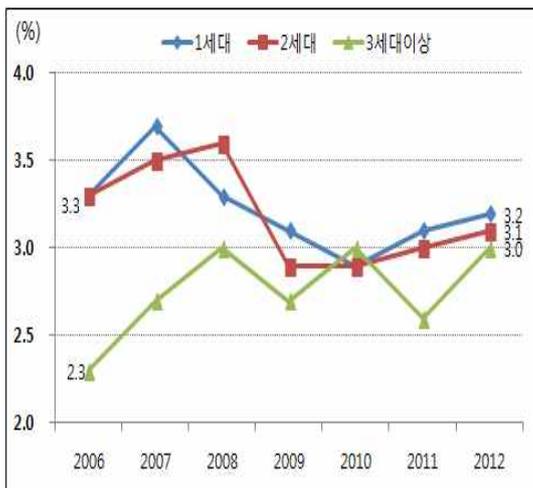
주1: 세금부담 = 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(경상소득-재산소득-이전소득)*100

주2: 가구원수 및 가구주 연령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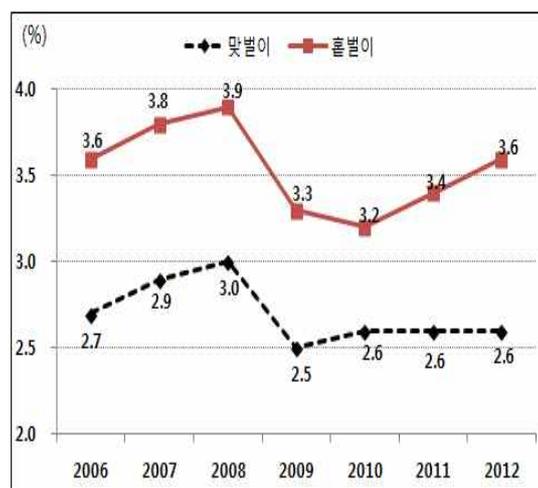
- (세대별) 조부모-부모-자녀 등으로 구성된 3세대 이상 대가족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,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·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3세대 이상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함
 -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1세대와 2세대의 세금부담은 감소하는 반면, '3세대 이상' 대가족의 세금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, 저출산·고령화 대책과 맞물려 대가족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 강화되어야 함
 - 2008년 이후 부모-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물론 1세대 가구의 세금부담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

- (맞벌이 여부) 2009년까지는 맞벌이와 홑벌이의 세금부담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격차가 유지되었으나, 2010년부터 맞벌이의 세금부담은 그대로 있으면서 홑벌이는 상승함에 따라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
 - 맞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2008년 3.0%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 현재 2.6%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반면, 홑벌이 가구의 세금부담은 2010년 3.2%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3.6%를 기록하고 있음

<세대별 세금부담 추이>



<맞벌이와 홑벌이의 세금부담 추이>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, 각년도

주1: 세금부담 = (경상소득세+사업소득세)/경상소득*100

주2: 1세대=부모 또는 자녀 단독, 2세대 = 부모+자녀, 3세대=조부모+부모+자녀

3. 시사점

- (세금부담 가장 높은 가구) 2012년 현재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가구 “소득 5분위(고소득층)에 속하는, 40대, 홀벌이, 상용직, 근로자 가구로서 부부 둘만 사는 경우”라고 할 수 있음
- (세금부담 가장 낮은 가구) 2012년 현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가구는 “소득 1분위(저소득층)에 속하는, 20대, 맞벌이, 자영업자 가구로서 3대가 함께 사는 경우”라고 할 수 있음
- (소득분위간 세 부담 격차 조정) 소득분위별 세금부담 추이(본문 4쪽)를 보면, 소득 5분위와 ‘소득 4분위 이하’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바, 소득분위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
 - 소득분위별 세금부담 추이(본문 4쪽)를 보면, 소득 5분위와 ‘소득 4분위 이하’의 세금부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므로, 과표구간 재조정이 필요함
 - 소득 1분위~4분위의 경우 소득 5분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, 명목세율 35%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8,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크게 벌어져 있음
- (상용직과 자영업 격차 조정) 상용직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금부담 격차가 크고 또 벌어지고 있는바,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
 - 직업별 세금부담 추이(본문 5쪽)를 보면, 상용직과 근로자 가구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, 자영업 가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세제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(40대 가구의 부담 조정) 자녀 교육과 가족 부양의 부담이 가장 높은 40대 가구주의 세금부담이 높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

- 연령별 세금부담 추이(본문 6쪽)를 보면, 40대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최근에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- (3세대 대가족 배려) 저출산·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3대가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에 영유아 보육과 고령자 돌봄의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
- 세대별 세금부담 추이(본문 7쪽)를 보면, 3세대 이상 가구의 세금부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,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
- (맞벌이와 홀벌이 격차 축소) 최근 맞벌이 세금부담은 제자리에 머물고 홀벌이의 세금부담은 계속 상승하면서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바, 더 이상 둘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함
- 맞벌이 여부에 따른 세금부담 추이(본문 7쪽)를 보면, 최근 홀벌이의 세금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경제연구본부 기업정책연구실장 김동열 (02-2072-6213, dykim@hri.co.kr)

< 참고 자료 >

-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, 2006~2012년
- 국세청, 『국세통계연보』, 각년도
- 행정자치부, 『지방재정연감』, 각년도
- OECD, Tax Database
- OECD, Taxing Wages, 2012
- 국회 예산정책처, '조세의 이해와 쟁점 1 (소득세)', 2013.7
- 국회 예산정책처, 『대한민국 재정』, 각년도
- 현대경제연구원,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, 경제주평 12-5 (통권 476호), 2012.2.3
- 고영선-문형표 편저, 『재정적자와 국민경제』, 한국개발연구원, 2000.12
- 기획예산처, 『한국의 재정』, 2007.1
- 전병목, "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 방향", 조세연구원, 2008.5
- 윤정규, "한국에 있어서 래퍼곡선 추정",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, 2004
- 김기승, 임일섭, 전승훈, "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", 국회 예산정책처, 2004.10
- 조세연구원, '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', 「재정포럼」 2005년11월호.
- 동아일보, '레이건식 감세 한국에서도 통할까', 2004년8월24일자 기사.
- 박형수, '미국의 감세정책과 최근 세수동향', 「稅研 06-07」 (조세연구원, 2006.07)